

#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향후 전망

김민관(통일사업부, matsuhara@kdb.co.kr)

- ◆ 일본은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대응,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 금지, 송금 제한, 자산 동결 등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강화
- ◆ 대북제재로 인해 북일 교역 전면 중단, 북한의 외화 획득수단 소멸 등의 효과를 거양하였으나, 지속적인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

## □ 일본에 의한 독자적 대북제재는 '83년부터 시작되었으며, '04~'06년 납북 피해자 문제에 따른 일본내 여론 악화 등으로 제재 강화 필요성 증대

- '80~'90년대 일본은 북한에 대해 총 3회의 제재를 실시하였으나, 북일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, 일본내 인식도 거의 무관심한 상황이었음

'80~'9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

일자	제재사유	제재내용
1983.11.7	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	- 일본측 외교관의 북한 관계자 접촉 금지 - 정부간 접촉 중단 등
1988.1.26	1987년 KAL기 폭파사건	"
1998.9.1	대포동 미사일 일본상공 통과	- 대북한 인도적 원조 중단 -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중지

자료 : 아사히(朝日) 신문

- '02~'04년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3차례 회담하는 등 북일관계가 진전되는 듯 하였으나, 납북 피해자 문제로 일본내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북일관계가 대결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대북제재 강화기조 형성
  - 당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납북 피해자 문제는 '04년 북한의 납치 간접 인정, 생존 납북 피해자 귀환 등을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, 이후 관련 소재 드라마·영화 공개 등으로 일본내 여론이 크게 악화

## □ 일본은 수출입 전면 금지, 인적왕래 중단, 송금 금지,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등으로 제재 지속 강화

- 일본 정부는 과거 행정부 차원의 임시적 조치 형태로 실시하던 대북제재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'04~'06년중 3개의 관련 법률을 정비

- 「외국환 및 외국무역법」(2004.2.26 개정) : 북한에 대한 상품 수출입 제한 및 대북한 송금 제한 등 규정
  - 「특정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2004.6.28 제정) :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 입항 금지, 북한에 기항한 선박에 대한 입항 제한 등 규정
  - 「납치문제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」(2006.6.23 제정) : 대북제재 발동요건에 일본인 납치피해자 관련 조항 추가 등 규정
- '06년 7월 북한이 동해에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되었으며, 이후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진전에 따라 점진적·지속적으로 강화

#### '06년 이후 일본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

일자	제재사유	제재내용
2006.7.5	북한의 미사일 발사	- 만경봉92호 입항 금지 - 북한 당국자 입국 및 북한 선원 상륙 금지 - 일본 공무원의 북한 입국 금지 - 북한행 전세항공기 취항 금지
2006.10.11	북한의 1차 핵실험	- 북한선박 입항 전면 금지 - 북한물품 수입 전면 금지 - 북한 국적자(재일조선인 포함) 입국 금지 - 대북한 사치품 수출 금지
2009.4.10	북한의 미사일 발사	- 북한 방문자 휴대가능 현금액 축소 (100만엔 → 30만엔) - 대북한 송금 신고 의무금액 축소 (3천만엔 → 1천만엔)
2009.6.12	북한의 2차 핵실험	- 대북한 수출 전면 금지
2010.5.28	천안함 폭침	- 북한 방문자 휴대가능 현금액 축소 (30만엔 → 10만엔) - 대북한 송금 신고 의무금액 축소 (1천만엔 → 300만엔)
2016.2.10	북한의 4차 핵실험	-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핵·미사일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- 10만엔 이하의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한 송금 금지 -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
2016.12.9	북한의 제5차 핵실험	- 북한에 기항한 일본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

자료 : 일본 내각부, 외무성 등

- 그 밖에도 독자적으로 선정한 북한 핵·미사일 개발 관련 103개 단체 및 108명의 개인에 대하여 일본내 자산 동결조치 실시
- 특히 자산동결 대상을 북한 국적 이외\*의 단체, 개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재 강화 움직임 지속

\* 상기 제재 대상에 포함된 15개 단체 및 7명의 개인은 중국(7개 단체 및 5명의 개인), 싱가포르, 나미비아, 이집트, 버진아일랜드 등 북한 이외의 국적을 보유

## □ 일본의 대북한 제재조치에 따라 북일 교역이 전면 중단되는 등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 소멸

- 일본은 한때 북한의 3대 교역 파트너였으나, 전면적인 수출·수입 중단조치가 실시된 '10년 이후 현재까지 북일 교역은 완전히 중단

북일 교역액 추이

단위 : 억 엔

구분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
일→북	165.6	106.0	95.7	68.8	50.8	10.7	7.9	2.6	-	-	-	-	-	-	-	-
북→일	294.0	201.4	177.4	145.3	88.7	-	-	-	-	-	-	-	-	-	-	-
합계	459.6	307.4	272.1	214.1	139.5	10.7	7.9	2.6	-	-	-	-	-	-	-	-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또한, 조총련계열 기업·개인을 통한 송금도 사실상 금지되었으며, 북한계 일본 주민의 북한 거주 친지 방문을 통한 우회적인 엔화 공급도 전면 차단

## □ 아베 정부는 美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여 앞으로도 대북제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, 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

- '17년중 아베 정부는 6회에 걸쳐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북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
  - 아베 총리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('17.11.6) 결과발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대북 제재 조치 확대를 천명
- 다만, 일본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별다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,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전망
  -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95%를 상회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반면, 일본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